

지식공유

2026
VOL. 04

Brief



지식공유브리프 아카이브 바로가기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톡

국제개발협력에서 인공지능(AI)
윤리원칙의 중요성



AI 에이전트 시대의 하이퍼오토메이션
시장과 발전 방향



개발협력/지식공유 동향 분석

Economic security beyond Europe's borders:
How the EU is reshaping its international
partnerships



KSP 포커스

세르비아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
정책 의지에서 실행 역량으로



CID 연구포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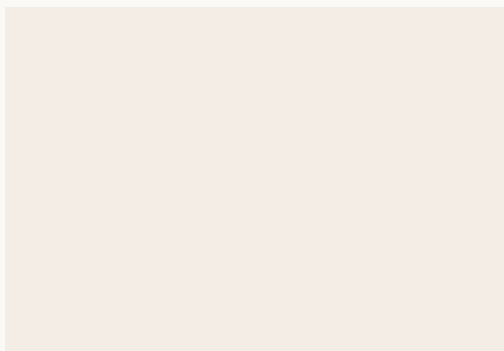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활성화



행사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하계학술대회
KDI 세션

국제개발협력의 지형 변화와 중견
공여국의 역할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김 권 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ikim@stepi.re.kr

국제개발협력에서 인공지능(AI) 윤리원칙의 중요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AIOLIA라고 하는 유럽연합(EU) 공동 AI 윤리 국제협력 프로젝트(AIOLIA Horizon Europe project)에 참여하여 돌봄 AI를 비롯한 AI 윤리원칙의 수립과 실행체계 설계 논의에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참여를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 보면, 단순한 연구 협력을 넘어 한국이 국제 윤리 규범 형성 과정의 한 자리를 확보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림1 Ten use cases, one shared challenge



자료: Horizon Europe Project AIOLIA (2026)

한편 AI 윤리원칙은 국제개발협력에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윤리원칙이라는 보편성에 기반하여 더 많은 국가로 전달하는 통로로서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고, AI 윤리원칙의 규범 진화에 따른 국가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먼저 보편성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을 살펴보면, AI 윤리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없다는 데에서 국제개발협력과의 관계성을 나타낼 수 있다. UNESCO의 AI 윤리 권고, OECD AI 원칙을 비롯하여 여러 윤리원칙에서 인간 중심성 등의 다양한 내용을 공통으로 다루기에 상당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AI 윤리원칙이 보편성을 갖는다면 더 많은 국가로 전달하는 통로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윤리원칙에 기반한 AI 생태계를 협력국에 구축하도록 함과 동시에 윤리 규범의 국제적 저변을 넓힘으로써 인간 중심의 가치와 안전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UNESCO AI 윤리 권고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협력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본고는 연구자의 학술적 견해를 담은 것이므로 연구자의 소속기관, 본고 발간기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

점이 AI 윤리가 개발협력 의제와 본래부터 맞닿아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AI 윤리원칙의 중요성은 '규범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 분명해진다. 신기술에 대한 규범은 처음부터 법률이나 강제규제로 등장하지 않는다. 기술 등장 초기에는 그 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철학적 담론이 먼저 형성된다. 그 이후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정부, 국제기구, 표준기구 등에서 이러한 담론을 원칙, 권고, 가이드라인, 자율규약의 형태로 비구속적이지만 일정한 형식을 갖춘 규범이 창출된다. 그리고 기술의 위험이 구체화되고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면 일부 영역에서는 영향평가, 인증, 인허가, 조달 기준, 감독기구와 같은 구속력이 있는 규범으로 발전한다. 즉 규범은 대체로 출현, 확산, 내면화의 경로를 거치며 진화한다고 할 수 있다(Finnemore and Sikkink, 1998).

이때 AI 윤리원칙은 윤리적·철학적 담론을 넘어 사실상의 규제적 의미도 갖게 될 수 있다. 물론 AI 윤리원칙이 아니라 그 원칙이 반영된 규범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AI 윤리원칙이 사실상의 규제로 전환될 때, 이를 먼저 숙지하고 대응을 완료한 국가와 기업은 분명한 우위를 갖는다. 특히 기업은 윤리원칙에 대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춘 쪽이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AI 윤리원칙에 대한 대응은 일종의 규제산업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윤리원칙이기에 규제산업에 대한 대응이라고 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규범산업'이라는 단어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기업에는 윤리 규범을 사실상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규범을 비용으로만 보는 기업과 시장 진입의 언어로 활용하는 기업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 표준화기구, 규제기관, 글로벌 기업의 방향에 따라 이미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남는 것은 전략적 선택뿐이다. 엄밀히 말하면 전략적 선택이라기보다 주어진 선택일 수도 있다. 선택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국제 윤리원칙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의 윤리 준비 수준(ERL, Ethics Readiness Levels)을 높이는 것이다. AIOLIA에서 논의되는 ERL은 우리가 기술 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s)라고 하는 것의 윤리 버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AI 시스템의 윤리 준비 수준이나 성숙도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단순히 기술이 작동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인간, 제도, 규제, 조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책임 있게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수출기업은 이러한 조치를 먼저 이행함으로써 규범 대응의 우위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보건의료, 돌봄, 교육, 행정서비스와 같이 공공성과 규제성이 높은 영역일수록 기술성능뿐만 아니라, 윤리 준비 수준에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은, 국제 연구에 참여하여 형성한 AI 윤리원칙을 국제개발협력에 어떻게 접목하고 확산할 것인가이다. 이는 개별 연구기관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방향성과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국제개발협력에서 AI 윤리원칙을 확산한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규제모형을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윤리원칙을 각 국가의 사회적·문화적·제도적 맥락에 맞게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원칙의 기계적·강제적 이전이 아니라, 해당 원칙을 현지 제도와 공공서비스 구조에 맞게 가공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할 평가·교육·조달·감독 역량을 함께 구축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AI 윤리원칙 기반 개발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특히 돌봄, 보건의료, 교육,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등 한국이 비교적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국과 함께 부문별 운영윤리를 공동 설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공조달, 인증, 사후평가 기준을 연계함으로써 협력국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이수현

가천대학교 IT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

AI 에이전트 시대의 하이퍼오토메이션 시장과 발전 방향

단순 업무자동화에서 '업무완결'로

생성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자동화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 업무자동화가 반복적인 개별 업무의 처리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기업의 데이터와 지식을 활용해 업무를 판단하고 실제 시스템에서 실행한 뒤 결과를 검증하는 단계까지 자동화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하이퍼오토메이션(Hyperautomation)이 있다.

가트너(Gartner)는 하이퍼오토메이션을 기업이 자동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정보기술(IT)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식별·검증·자동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으로 정의한다. 최근에는 이를 단순한 자동화 기술의 결합이라기보다 데이터·지식,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 업무흐름(Workflow),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 기존 업무시스템, 보안·거버넌스를 하나의 운영구조로 연결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자동화의 목표가 특정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에서 전체 업무가 안전하게 끝까지 완료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하이퍼오토메이션 주요 요소 기술

시장계층	주요 역할	대표 구성
데이터·지식	기업 문서·업무데이터·규정·관계를 AI가 활용할 수 있게 구조화	RAG·온톨로지·지식그래프
AI Agent·지능	업무목표 이해, 추론·계획, 전문 Agent 및 Multi-Agent 협업	LLM·sLLM-Agent Builder
Workflow·Orchestration	업무절차와 사람·Agent의 역할·실행순서·예외를 통제	Workflow·iBPMS·오케스트레이션
Tool·업무시스템 실행	ERP·CRM·그룹웨어·API를 호출해 실제 업무를 완료	API·iPaaS·RPA·커넥터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업무흐름과 병목을 발견하고 자동화 대상을 검증	프로세스·태스크 마이닝
비정형 입력 처리	문서·음성·대화·이미지를 업무 가능한 정보로 전환	IDP·OCR·STT·NLP
거버넌스·운영	권한·보안·검증·감사추적·성능·비용을 지속 관리	AI TRISM·Observability

자료: Gartner, Mordor Intelligence(2026), Research Nester(2025), GM Insights(2025) 종합

특히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이 문서·이미지·음성 등 비정형 정보를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게 되면서 자동화 대상은 정형화된 반복 업무에서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AI 에이전트가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그룹웨어 및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등과 연결되면서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보조수단을 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실행주체로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연 16%대 성장, 국내에서는 실행형 AI 시장 빠르게 확대

글로벌 하이퍼오토메이션 시장은 향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5년 656.7억 달러에서 2035년 3,062.1억 달러로 확대되어 연평균 16.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가 현재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연평균 19.1%의 가장 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 중국의 제조 현대화,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정책, 한국과 일본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 등이 주요 배경이다.

국내에서도 AI 수요는 검색·답변·요약 중심의 보조기능에서 문서와 데이터를 이해하고 후속 업무까지 수행하는 실행형 AI로 이동하고 있다. Grand View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국내 AI 에이전트 시장은 2025년 1억 9,380만 달러에서 2033년 76억 4,93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약 39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에서도 실행형 AI에 대한 기업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성장이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판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I 에이전트가 실제 기업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업 데이터와 문서를 정비하고, 업무절차와 권한을 설계하며, 기존 시스템과 연결해야 한다. 아울러 온프레미스(On-premise)·폐쇄망 배포, 보안, 결과검증, 감사추적, 성능평가와 지속적인 운영관리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장은 플랫폼과 구축·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 SI), 운영서비스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사례가 보여주는 변화: 모델 성능보다 '운영완결성'

글로벌 기업의 실제 도입사례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 Toyota의 O-Beya 시스템은 설계보고서와 기술문서 등 내부 지식을 전문 분야별 AI 에이전트에 연결하고,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전문지식을 병렬로 탐색해 결과를 종합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기업의 AI 활용단위가 범용 챗봇에서 기업지식 구조화-전문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Multi-Agent) 협업-접근통제를 결합한 구조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¹⁾

Dow는 이메일로 들어오는 PDF 화물송장을 감지해 데이터를 추출하고 계약조건과 운송비를 검증한 뒤 이상항목을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연결했다. 여기서 핵심은 문서인식이나 요약 자체가 아니라 문서 수신부터 데이터 추출, 비용검증, 이상탐지, 담당자 조치까지 하나의 종단 간 업무흐름으로 연결했다는 점이다.²⁾

금융회사 BNY 사례에서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BNY는 기업용 AI 솔루션과 '디지털 직원'을 실제 운영환경에 배치하면서 각각에 업무 역할과 자격증명, 감독자를 부여하고 권한·승인·실행기록·지속적인 감독을 결합하고 있다. 이는 금융·공공과 같은 규제산업에서는 AI 에이전트의 수나 모델 성능보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수행했고, 누가 이를 검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³⁾

1) [1] Microsoft, "Toyota Is Deploying AI Agents to Harness the Collective Wisdom of Engineers" (2024.11.19)
[2] Microsoft Developer Blog, "Toyota Motor Corporation Innovates Design Development with Multi-Agent AI" (2025.4.3)

2) Microsoft, "AI Impact at Dow: Copilot Identifies Millions in Cost Savings" (2024.11.13)

3) [1] BNY, "AI in the Next Phase: Driving Adoption" (2025.10.20)
[2] BNY, "Annual Report 2025" — Enterprise AI Solutions and Digital Employees
[3] Microsoft, "The Making of a Frontier Firm: How AI Is Redesigning Work at BNY"

사례별 적용범위와 성과 측정방식이 달라 직접적인 성과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공통적으로 기업지식, 기존 시스템 연결, 사람의 승인과 예외처리, 결과의 추적가능성, 지속적인 성능·비용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결국 시장의 구매기준이 'AI 모델을 보유했는가'에서 실제 업무를 얼마나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완결할 수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의 중심도 '기업 운영역량'으로 이동

이에 따라 하이퍼오토메이션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클라우드 기업은 기존 오피스, 전사적 자원관리(ERP), 클라우드 생태계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내재화하고 있으며, 자동화·오케스트레이션 전문기업은 AI 에이전트와 로봇, 사람을 하나의 종단 간 프로세스로 조율하는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다. 국내 대형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은 대규모 시스템통합(SI) 경험과 업무시스템 운영역량을, 기업용 AI 전문기업은 한국어·산업지식과 온프레미스·폐쇄망 대응역량을 각각 경쟁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업자의 출발점은 다르지만 경쟁기준은 점차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 데이터와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하는지, 여러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조율하는지, 업무흐름과 사람의 승인절차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기존 업무시스템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증·감사·개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금융·공공·제조 분야에서는 보안과 규제 특성으로 인해 온프레미스·폐쇄망·하이브리드 배포, 한국어 및 산업별 업무지식, 권한·승인·감사추적 등이 핵심 구매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글로벌 클라우드 생태계의 규모만으로 시장 경쟁력이 결정되기보다는 기업의 실제 업무환경에서 데이터-AI 에이전트-업무흐름-기존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과제: 자율성 확대보다 '통제 가능한 자동화'

향후 하이퍼오토메이션은 단일 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비서(AI Assistant)에서 업무수행형 AI 에이전트, 협업형 멀티에이전트, 전사적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술의 발전이 모든 AI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 증가, 불명확한 사업가치, 보안과 위험관리 문제는 실제 상용화의 주요 제약요인이다. 따라서 시장의 핵심 질문도 'AI 에이전트를 얼마나 많이 도입할 것인가'보다 어떤 업무에 적용해 얼마만큼의 성과를 창출하고, 그 과정의 위험과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도입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데이터와 업무지식을 정비하고 반복성·절차 명확성·성과측정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ERP·CRM·그룹웨어 등 기존 시스템과 연결하고 AI 에이전트의 등록·평가·권한·관계체계를 표준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AI 에이전트와 사람이 참여하는 부서 간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검증된 업무흐름과 AI 에이전트를 재사용 가능한 산업별 자산으로 축적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결국 하이퍼오토메이션 시장의 성장은 AI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 자체보다 기업이 AI의 실행과 결과를 통제하면서 실제 업무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얼마나 잘 구축하는가에 달려 있다. 향후 경쟁력 역시 모델 성능만으로 결정되기보다 데이터 준비 수준, 시스템 연결성, 보안과 거버넌스, 운영 안정성, 정량적 투자효과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능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사무·반복업무의 자동화에 따른 직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직자 재교육과 직무전환을 지원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설명가능성과 인간의 관리·감독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vano di Carlo
Senior Policy Analyst
European Policy Centre (EPC)
i.dicarlo@epc.eu

Economic security beyond Europe's borders: How the EU is reshaping its international partnerships

유럽연합(EU)은 그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번영과 협력을 가져다준다는 낙관론을 전제로 대외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첨단기술 경쟁 등을 계기로 개방성을 유지하되 경제안보를 핵심 축으로 삼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핵심원자재법과 글로벌 게이트웨이 등을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회복력 있는 파트너십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광물 보유국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가 전략적 요충지로 떠올랐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과거처럼 단순 원자재 공급처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 한편, 현지 가공·기술·산업고도화 투자를 유치해 파트너국이 더 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도 제공한다. 경제안보와 개발협력의 조화를 위해서는, EU가 자국 취약성 해소를 넘어 파트너국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상호호혜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Economic security beyond Europe's borders: How the EU is reshaping its international partnerships

For much of the post-Cold war period, the European Union's (EU) foreign and economic policy rested on a broadly optimistic assumption: deeper economic interdependence would generate prosperity while fostering political cooperation and, to some extent, convergence towards the so-called liberal democratic norms and institutions. Trade would drive growth and economic integration would inevitably bind countries more closely together. For some time, this approach appeared to work.

Today, while this framework remains important, it has been tempered by a more cautious assessment of the risks of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Openness remains indeed central to the EU's worldview, but it now sits alongside a stronger focus on economic security. Geopolitics has injected a measure of realism in the EU's economic outlook.

Rising geopolitical tensions, supply-chain disruptions,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concerns over strategic dependencies have forced the EU to reconsider not only where critical goods come from, but also how economic partnerships are built and shaped. The aim is to make its economy more resilient and diversified by reducing excessive dependencies on third countries, strengthening supply-chain diversification, and protecting critical technologies and infrastructure. The EU may have been relatively late to this game, but it is certainly not alone.

The consequences reach well beyond Europe. This recalibration is also reshaping the environment in whic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akes place.

For the development sector, it presents both an opportunity to mobilise greater resources and a risk that development objectives become subordinated to more strategic interests.

When interdependence becomes a risk

The EU's economic security agenda has emerged in response to a series of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hocks that exposed the vulnerabilities of an interconnected global economy. The COVID-19 pandemic revealed the weaknesses in global supply chains, while Russia's war against Ukraine demonstrated, for instance, the risks of excessive energy dependence. At the same time, growing competition over semiconductors,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technologies and cleantech, has increasingly blurred the boundary between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Brussels has responded with a growing toolkit, including the diversification of critical supply chains, greater scrutin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tection of sensitive technologies, and the strengthening or development of partnerships with countries that can contribute to make its economy more resilient. The 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captures this approach by linking three broad objectives: promoting competitiveness, protecting against economic risks, and partnering with a wide range of countries.

This represents an important evolution, whereby economic opportunities are no longer the sole measure to evaluate a successful relationship, as resilience and strategic considerations increasingly matter as well.

Yet, translating this ambition into practice is far from simple. In a market economy, companies may be reluctant to sacrifice short-term gains for broader resilience goals. Nor does a degree of "geopolitical" alignment sufficiently guarantee economic security, as the EU's increasingly complex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US) shows.

The shift is also changing the geography of Europe's economic relationships. Countries across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are (re-)gaining importance as potential suppliers, markets and investment destinations, while negotiations over new or previously stalled free trade agreements have gathered fresh momentum. However, turning this interest into durable partnerships requires more than just identifying alternative sources of trade and investment. Domestic political constraints, competing interests and disagreements within Europe itself can make coordination difficult.

A new strategic role for global partnerships

The new logic is already visible across the EU policy spectrum. For instance, the Critical Raw Materials Act seeks to reduce excessive dependencies and diversify sources of supply, while the Global Gateway tries to mobilise European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energy, transport, health and digital connectivity.

For partner countries, this could open significant opportunities. Better bilateral access to markets, technology, and finance could support (re-)industrialisation and deeper integration into global value chains. All this does not make the EU's approach purely transactional, but it does suggest that, strategic considerations are becoming more explicit in decisions about which partnerships Europe pursues and what it expects from them.

There is, however, a further complication. While groups of "like-minded" countries are increasingly cooperating in specific sectors, building a coherent economic security coalition – or alliance – capable of coordinating responses to major powers remains difficult. The experience of how some European and Asian countries negotiating tariffs with the US has shown how quickly national interests can take precedence over collective strategies, with governments seeking the most favourable deal for themselves.

For development policy, this matters because the objectives of economic 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do not always point in the same direction. Development cooperation has traditionally focused on poverty reduction, human development, and institution-building. Economic security introduces a different set of priorities. In some cases, the two agendas reinforce each other. In others, they can pull in opposite directions or compete.

The ten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developing and emerging economies. Many of Europe's development partners also possess resources and/or large markets that are strategically relevant to the EU. Critical minerals are the clearest example. For instance, the energy transition is increasing demand for lithium, cobalt, nickel, copper and rare earth minerals, creating new incentives for Europe to deepen relations with resource-rich countries.

The risk is that this could reproduce a familiar pattern. If economic security becomes synonymous only with securing access to raw materials, developing economies could once again find themselves locked into the role of commodity suppliers, while processing, technology and higher-value activities remain concentrated elsewhere.

There is, however, another possible path. Economic security could provide both the political justification and financial rationale for supporting industrial upgrading in partner countries. Rather than focusing exclusively on securing supplies, European partnerships could invest again in local processing, infrastructure, skills and technology. This would build a more balanced relationship in which partner countries capture a greater share of the economic value generated.

This distinction is important. A development-oriented approach to economic security would ask not only whether Europe can diversify its supply of critical goods, but also whether the resulting partnerships contribute to a positive economic transformation in partner countries. It would treat local value creation as a component of supply-chain resilience rather than as an obstacle to it. This also requires a more convincing European narrative, which can be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like-minded" countries. In addition, the EU cannot define its offer primarily in contrast to China. If it wants to present itself as a credible alternative, it must demonstrate what makes its model attractive on its own terms.

What economic security means for development policies

The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policy are becoming therefore clearer.

First, development finance is likely to become more closely connected to strategic objectives.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rojects may increasingly be evaluated not only for their development impact, but also for their contribution to supply-chain resilience, energy security or digital connectivity. With public budgets under pressure, the prospect of a strategic return can make such investment easier to justify to European domestic audiences. In this context, development actors will nevertheless need to ensure that this alignment does not turn cooperation into another instrument of geopolitical competition, including among close partners.

Second, economic security could strengthen the case for more inclusive value chains. The question is not simply whether Europe can secure the resources it needs, but what kind of economic relationships it builds in doing so, and whe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like-minded” countries remains possible. Such cooperation could act as a multiplier, helping to avoid “friendly fire” among close partners, which means unnecessary competition and duplication of efforts that could lead to counterproductive races to secure access to resources and markets.

Third, intensifying geoeconomic competition, particularly between the US and China, risks putting developing countries under growing pressure to align with particular economic, political or technological blocs. Development cooperation can help preserve their room for manoeuvre by supporting diversified partnerships and regional integration rather than dependence on a single external power. Eventually, many developing and emerging economies want to diversify their relationships with major powers just as the EU does.

Economic security as a two-way street

The main challenge is therefore to ensure that economic securit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reinforce rather than undermine each another.

For the EU, this means resting the temptation to view international partnerships primarily through the lens of its own vulnerabilities. Economic security can create incentives for stronger partnerships, but those relationships will only be durable if they deliver genuine benefits on both sides. Ultimately, the EU’s external partnerships will be strongest if economic security is understood not only as a protection from global interdependence, but as a way of managing it through stronger an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

European Policy Centre(EPC)는?

1996년 설립된 독립적인 비영리 싱크탱크로, 유럽 통합과 EU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벨기에 법에 따른 국제 비영리단체로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근거와 분석에 기반한 정책 논의를 통해 유럽 각국과 EU의 정책결정자들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EU 정책과 유럽의 미래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 지 민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3팀

jimin@kdi.re.kr

세르비아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 정책 의지에서 실행 역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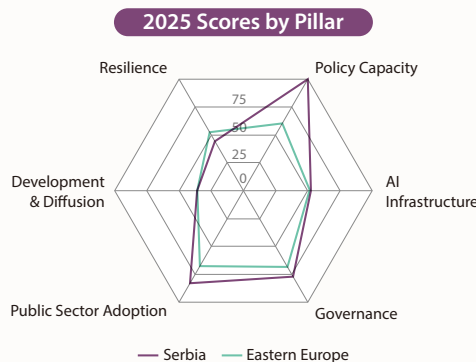
1. 세르비아의 공공부문 AI 활용 현황

최근 각국 정부는 행정 효율화와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공공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이다.

세르비아 역시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이다. 2022년에는 세르비아의 국가 AI 플랫폼이 OECD 공공부문 혁신 관측소(OPSI)에 우수 혁신사례로 등재되었으며,¹⁾ 2024년에는 인공지능글로벌 파트너십(GPAI) 의장국으로서 베오그라드 선언²⁾을 이끌어 냈다. 2025년 1월에는 「AI 개발전략 (2025-2030)」을 채택하며 보건의료, 공공안전 등 국가 우선순위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과 국가 AI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다.

옥스퍼드 인사이트(Oxford Insights)에 따르면, 2025년 세르비아의 정부 AI 준비도(Government AI Readiness Index) 순위는 전 세계 195개국 중 40위이다.³⁾ 동유럽 지역 평균과 비교하면 정책 비전, 정부 추진 의지, 거버넌스, 공공부문 도입 영역에서 지역 평균을 뚜렷이 상회한다. 반면 'AI 인프라' 등 실행 영역과 '개발 및 성과확산' 영역은 지역 평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다.⁴⁾ 이는 세르비아가 정책 설계와 정치적 의지 측면에서는 이미 상당한 성숙도에 도달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실행 기반과 확장성은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그림1 정부 AI 준비도 부문별 점수: 세르비아 vs. 동유럽 비교



실제 세르비아 공공부문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부재, 지역간 AI 인프라 격차, 낮은 시민 신뢰도 등 다수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세르비아 과학기술개발혁신부(MoSTDI)는 한국의 공공분야 AI 도입 경험을 참고하여 공공부문 AI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세르비아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에 대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KSP 정책자문을 요청했다.

1) 출처: <https://oecd-opsi.org/innovations/ai-supercomputing-platform/>

2) 베오그라드 선언(Belgrade Ministerial Declaration on AI regulation)은 2024년 12월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채택된 선언이며, AI가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핵심 가치를 존중하며 윤리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데이터 거버넌스 등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정부·민간·학계·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포용적 파트너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출처: <https://www.geciclaw.com/a-new-era-in-ai-regulation-belgrade-declaration-adopted/>

3) Oxford Insights,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 Report 2025

4) 부문별 점수: 정책 비전(Policy Vision) 100점, 정책 의지(Policy Commitment) 100점, 전자정부 서비스(E-Government Delivery) 87.85점, 데이터 품질(Data Quality) 82.70점인 반면, 컴퓨팅 역량(Compute Capacity) 7.91점, AI 산업 성숙도(AI Sector Maturity) 23.42점, 안전·보안(Safety and Security) 33.33점, 인적 역량(Human Capital) 41.44점이다(각 영역 100점 만점).

2. 신뢰할 수 있는 공공 AI를 위한 협력의 시작

이 사업은 세르비아 공공 AI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한국의 정책 경험을 토대로 협력국 환경에 맞는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부문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활용해 온 한국의 경험을 참고 사례로 하여, 세르비아의 신뢰할 수 있는 공공 AI 도입과 활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시작된 것이다. 정책자문은 다음의 세 가지 목표로 구성된다.

첫째, 공공부문 AI 도입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르비아 내 활용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강한 추진 의지와 달리 여러 제약요인으로 기술 도입과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어, 세르비아의 여건을 반영한 단계적 도입전략과 우선 적용 가능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다.

둘째, AI 기반 공공 R&D 혁신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공 R&D의 기획·조정·평가를 담당하는 과학기술개발혁신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례를 참고한 세르비아형 혁신 모델과 소규모 시범 사업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및 품질보증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르비아는 크라구예바츠 국가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 부재로 기관 간 공유가 저조하고, 중앙집중식 오픈 데이터 플랫폼 또한 부재해 민간·스타트업의 접근이 제한된다. 이러한 현황과 우선 과제를 진단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및 인프라 보완 방향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진1 2025/26 세르비아 II KSP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서울AI재단 방문)



3. 공공부문 AI 도입과 활용을 위한 정책제언: 공감대 형성과 협력 저변의 확대 과정

2025년 12월 베오그라드에서 사전협의를 개최한 이후, 연구진은 2026년 2월 착수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4월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를 거쳐 자문 주제를 확정하고 세르비아의 병목 지점과 우선 과제를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5월에는 잠정 정책제언을 공유하고 세르비아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세르비아 과학기술개발혁신부 차관을 단장으로 3개 기관⁵⁾ 소속의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 6명이 한국에 초청되었다.

우선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의 잠정 정책제언 발표와 협력국 관계자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5) 세르비아 과학기술개발혁신부, 베오그라드대학교, 공공정책처

세르비아 대표단은 정책제언의 내용이 사업의 요청사항에 부합하고 양국의 공공부문 AI 활용 관행을 적절히 비교하며 세르비아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정책실무자 연수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AI재단, 인공지능안전연구소, LG CNS 등을 방문하고, 기술경영경제학회 주관 국제학술대회인 '2026 R&D Management Workshop in Seoul'에 참석했다. 기관별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한국의 공공데이터 거버넌스와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대표단은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체계 등에 특히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를 총괄하는 기구와 체계가 부재한 세르비아의 현황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방문한 서울AI재단에서는 AI를 활용한 도시 행정 혁신사례와 공공부문 대상 AI 도입 컨설팅 사례가 폭넓게 소개되었다. 대표단은 공공부문 AI 적용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연령층별 맞춤 AI 교육 프로그램의 세르비아 도입 가능성에 관해 활발히 논의했다.

사진2 2025/26 세르비아 II KSP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한편 AI 안전을 전담하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이곳을 방문한 대표단은 AI 위험의 발굴·평가를 총괄하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기능과, 기관별로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설립·운영되는 한국의 공공 AI 거버넌스 체계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세부 전문기관이 거의 없는 세르비아의 거버넌스 체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LG CNS는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AI 전환을 지원하는 IT 서비스 기업이다. 교육·법률·조세·안전 등 국가 행정 인프라 AX 사업 수행 사례와 솔루션이 소개되었다. 대표단은 민간 기업이 공공부문의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한국의 민관 협력 모델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연구진은 2026년 8월 세르비아 현지에서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를 개최하여 연구의 최종 결과와 정책제언을 공유하고, 후속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AI 확산을 위한 한-세르비아의 지식공유 경험이 양국의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동유럽 지역의 공공 AI 정책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활성화

연구진 | 김대용, 김상기, 이창근, 조경훈, 이진아



나 정 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위원

lalajh@k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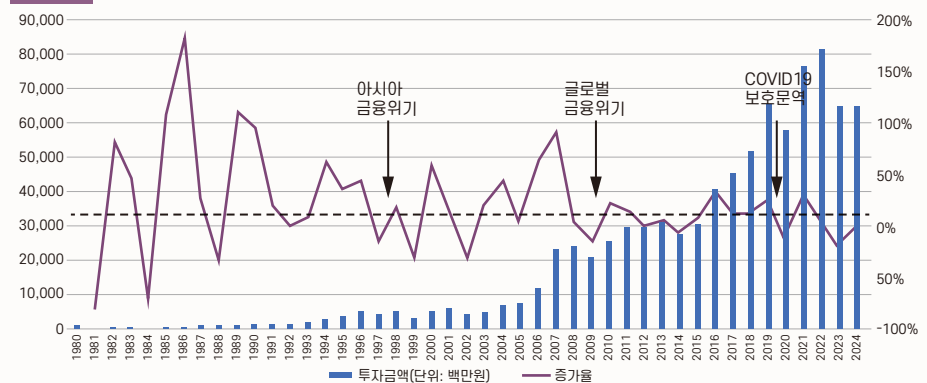
연구 배경 및 목적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전체 자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민간금융과 해외직접투자(FDI)의 비중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무역을 통한 개발(AfT), 민간재원 동원, 혼합금융 등 새로운 개발재원 전략을 모색하는 이유이다. FDI는 고정자본 형성과 고용 창출은 물론 기술 이전과 지식 확산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개도국 성장의 촉매로 평가받는다. 한국 역시 산업단지 조성, 사회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등 공공투자가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수출과 고용을 함께 키운 경험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제개발협력과 해외직접투자를 연계하는 한국형 ODA 모델을 제시한다.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구조 변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980년대 초 5년 평균 1억 4,000만 달러에서 2020~2024년 연평균 720억 달러로 약 489배 늘었다. 투자 목적은 저임 활용에서 '현지 시장 진출'과 '제3국 진출'로 이동했고, 업종은 제조업에서 금융투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투자 주체 면에서도 대기업 비중이 낮아지고 연기금 등 기타 투자자의 역할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미국, 중국에 이어 베트남이 부상해 2023~2024년에는 대(對)베트남 투자가 대중국 투자를 넘어섰다. 개발협력 전략도 이러한 구조 변화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과 증감률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대기업 FDI의 파급효과: 삼성전자 베트남 사례

베트남 기업조사(VES) 마이크로데이터(2006~2018년)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삼성전자의 주요 생산거점인 박닌·타이응우옌 인근 전자·기계 기업의 총요소생산성(TFP)은 평균 2.1%, 노동생산성은 약 7.8% 상승했다. 부품·중간재를 공급하는 상위(업스트림) 산업의 TFP도 약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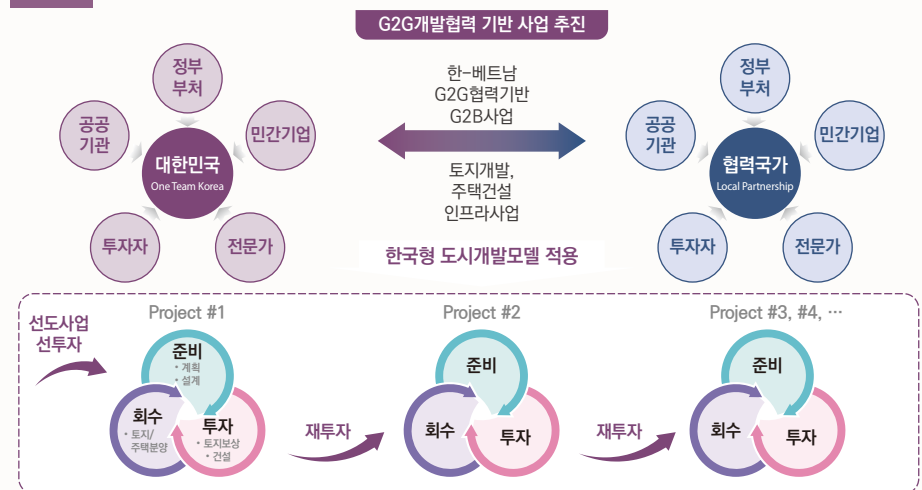
높아졌다. 특히 삼성 진출 이후 설립된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보다 TFP가 약 28%, 노동생산성이 약 34% 높게 나타나, 공급망 편입을 겨냥한 '전략적 창업'이 활발했음을 시사한다. 중소기업의 개선 폭이 더 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산업 간 연계도가 높은 업종에 파급효과가 집중되어, FDI가 지역·산업 간 격차를 키울 위험도 함께 확인되었다.

산업다각화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2006년 농업·저부가가치 제조업에 머물던 베트남의 산업 공간은 2022년 '확산형 서비스 + 집중형 제조업'의 이중 구조로 재편되었으며, 박닌·타이응우옌·동나이·빈즈엉 등 FDI 집중 지역이 그 전환을 이끌었다. 기존 역량을 확장하는 관련다각화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하는 비관련다각화에는 제도·인력·기술 기반을 놓는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 ODA가 개입할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베트남 경제구역과 우리 기업의 참여 전략

베트남은 해안 18개, 국경 26개 등 40여 개 경제구역(EZ)을 지역산업 육성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이퐁 빈부-깃하이에는 LG가 누적 8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2만 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했다. 반면 중부권 경제구역은 동서경제회랑(EWEC)과 연결된 입지 잠재력이 있지만 인프라·인력·제도 기반이 취약해 투자유치가 저조하다. 한국의 경제자유구역(FEZ) 운영 경험은 통합 지원체계, 정주여건, 특화전략 측면에서 공유할 자산이 많다.

그림2 베트남 경제구역 사업 모델



자료: 저자 작성.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첫째, ODA는 인프라, 인적자본, 제도에 집중해 FDI의 진입 토대를 만드는 '촉진자'로 재설계해야 한다. 자본재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은 민간투자를 구축(crowding-out)할 수 있다. 둘째, 한-베 경제구역개발 공동위원회 등 G2G 협력 채널을 제도화하고, 기획(KSP-K-City Network)→타당성조사(ODA)→실행(EDCF·PPP)→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순환형 자금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현지 중소기업의 품질관리·공정개선 역량과 직업훈련·산학연계를 지원해 파급효과의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도시개발·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에너지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모델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중부권 경제구역을 대상으로 기획·사전타당성조사 ODA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선점형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ODA가 제도·기술·인력 기반을 놓고 FDI가 산업의 확장을 만들 때, 개발협력과 해외투자를 결합한 포괄적 경제협력 모델이 완성된다. 이 틀은 베트남을 넘어 다른 중점협력국으로 확장할 수 있다. ■

행사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하계학술대회 KDI 세션



2026년 6월 24일,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개최된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하계학술대회에서 'Mutual Gains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s(상생형 개발협력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주제로 단독 세션을 진행하였다. 이번 세션은 최근 주요 공여국의 원조 감축,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에 따라 변화하는 개발협력의 환경 속에서 한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국의 개발협력 정책 변화와 전략을 살펴보고자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표로 닐스 케이저(Niels Keijzer) 독일 지속가능개발연구원(IDOS) 선임 연구원은 독일의 개발협력 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하며, 2026년 1월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가 발표한 개혁안이 빈곤 퇴치, 평화 증진, 경제협력, 전략적 동맹 강화를 4대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개발 정책을 국가 안보의 통합적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표에서 나정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위원은 2026년 2월 수립된 한국의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소개하며, 한국은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ODA' 및 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발표하였다. 세 번째 발표에서 이즈미 오노(Izumi Ohno)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명예교수는 2023년 개정된 일본 개발협력헌장을 토대로 일본은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경 속 '사회적 가치 공동 창출(Co-creating Social Values)'을 키워드로 수원국과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슈테판 클링게비엘(Stephan Klingebiel) IDOS 국제·초국가협력 부서장이 좌장을 맡아 독일·한국·일본 개발협력의 공통 과제는 국익 추구와 개발협력의 전통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임을 재확인하며 세션을 마무리하였다. ■

14:50-16:20

[KDI] Mutual Gains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s

사회 방호경(KDI)

발표 Niels Keijzer(IDOS) "Analysing the reform of Germany's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a European perspective"

나정현(KDI) "Shifting Toward an Era of Strategic ODA: The Way Forward for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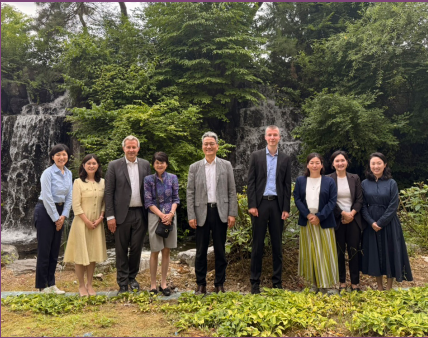
Izumi Ohno(GRIPS) "Japanese Development Cooperation in a changing world"

토론 좌장: Stephan Klingebiel(IDOS)

Niels Keijzer(IDOS), 나정현(KDI), Izumi Ohno(GRIPS)

행사

KDI-IDOS 공동 세미나 국제개발협력의 지형 변화와 중견 공여국의 역할



2026년 6월 25일,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독일 지속가능개발연구원(IDOS)과 공동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지형 변화와 중견 공여국의 역할(Explor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Middle Powers in the Future of Global Development Agenda)」을 주제로 KDI-IDOS 공동 세미나를 KDI 원내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변화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 속에서 중견국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최신 정책 논의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발의제 추진을 위한 중견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세션 1에서는 <중견 공여국의 역할(The Role of Middle Power Donors)>을 주제로 네 편이 발표되었다. 이즈미 오노(Izumi Ohno)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명예교수는 일본이 전통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을 잇는 가교로서, 지식공유를 넘어 '공동 지식 창출(Knowledge Co-creation)'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혜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평가팀장은 중앙아시아에서 중견국은 차별화된 '니치외교(Niche Diplomacy)'를 펼쳐야 하며, 한국은 디지털 거버넌스 및 혁신생태계 구축 분야의 정책자문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손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정책자문 사업 분절화와 통합전략 부재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부처 간 통합 프레임워크 구축, 현지화(Localization), 상호 학습(Mutual Learning) 등을 제안하였으며, 닐스 케이저(Niels Keijzer) IDOS 선임 연구원은 유럽연합(EU)이 재정 규모가 아닌 정책적 리더십(Policy Leadership)을 바탕으로 글로벌 개발의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세션 2에서는 <중견 공여국 간 협력 방안(Opportunities for Further Cooperation Between Middle Powers)>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민정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위원은 한국의 디지털경제 분야 AfT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정책·기술 가교 역할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안나-카타리나 호르니지(Anna-Katharina Hornidge) IDOS 원장은 허위정보 확산과 권위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과학적 역량에 기반한 연대 구축과 과학-정책 인터페이스(Science-Policy Interface)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슈테판 클링게비엘(Stephan Klingebiel) IDOS 국제·초국가협력 부서장은 '유사입장국 국가 국제주의(Like-minded Internationalism)'를 다극화·분절화 시대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한·독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번 KDI-IDOS 공동 세미나를 통해 주요 공여국의 ODA 감축과 지정학적 분절화로 개발협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독일·일본 등 중견 공여국이 신뢰와 지식에 기반한 협력과 연대로 글로벌 개발의제를 추진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요 연구 및 협력 실적 ▶

💡 2025년 국제개발협력연구

I. 개발협력 정책연구	경제안보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식량·물·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경제안보의 중요성과 식량·물·에너지 안보 관련 개념 및 국제 동향 분석 ■ 아시아 중점협력국의 식량안보 수준과 현안 분석 ■ 에너지안보 개념 변화 및 국제협력을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전략 분석 ■ 식량·물·에너지 넥서스 기반 안보 개념 확립 및 국제개발협력 가능성 협력방안 도출 개발도상국 물가·생산성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비선형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기후변화와 생산성 간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제기구·지역별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동향 및 전략 분석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응(adaptation)으로의 국제개발협력 시사점 도출
II. 지역·국가 심층연구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활성화 ■ 지식공유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요인 및 효과 분석 ■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 사례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경험 분석 ■ 한국과 베트남 경제구역 비교를 통한 한국기업 참여 전략 제시 ■ 관련 국제개발협력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호혜적 국제개발협력 방안 ■ 아프리카 역내무역 추이 및 경제통합 현황 분석 ■ AfCFTA 협정 주요 내용 및 의의 검토 ■ RTA 효과 분석을 통한 AfCFTA 이행 시사점 도출 ■ AfCFTA를 활용한 호혜적 국제개발협력 방안 모색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 분석: 아태지역의 무역환경을 중심으로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아태지역 무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 분석 ■ 국가별 대응 역량을 평가하여 한국의 기후 ODA 및 국제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 도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개념과 특징 분석 ■ 디지털 무역 이론 및 ASEAN·인도-태평양 지역 정책·규제 동향 분석 ■ 디지털 전환과 무역 확대가 개도국 성장·무역·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도출 ■ ASEAN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
III. 한국발전경험 체계화 연구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5: 사례와 평가 ■ 주요 협력국의 분야별 정책사례에 대한 개별적 연구·조사(Case Study) ■ 몽골/주택금융, 베트남/농촌개발, 코스타리카/탈탄소, 헝가리/교통 정책의 사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례 및 요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KSP, EIPP 정책자문사업에 시사점 도출



국제협력사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5	■ 공적개발원조(ODA) 전정부적(Whole of Government) 조정 거버넌스 공동연구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ADB)	2023	■ Beyond Boundaries: Navigating the Digital Landscape for a Green and Inclusive Future
아시아개발은행(ADB)	2021	■ 스리랑카 국가개발계획 지원
아시아생산성기구(APO)	2024	■ 스리랑카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5
	2023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4
	2022	■ 파키스탄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 중고소득국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전환에 대한 정책연구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3
	2021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2
	2020	■ 베트남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 라오스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세계은행(WB)	2024-25	■ 사법제도의 디지털화와 접근성 강화에 관한 가이드
	2021	■ COVID-19의 외국인고용허가제(EPS)에 대한 영향
	2019	■ 노동시장 수요변화에 따른 숙련도 제고 정책연구사업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3차(카메룬, 서부발칸)
	2018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2차(10개국 개별 사업 및 성장 모형, 공기업 개혁 연구)
	2017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1차(8개국 개별 사업 및 거시경제, 포괄적 성장 연구)
미주개발은행(IDB)	2021	■ IDB Invest 협력사업: 한국의 디지털 전환 및 생태계 연구
	2020	■ 라틴아메리카와의 한국 인프라 서비스 지식공유 및 공동연구
유럽부흥 개발은행(EBRD)	2022	■ 이집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연수·연구
	2018	■ EBRD-KDI 공동 민관협력(PPP)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사업
유엔개발계획(UNDP)	2017	■ KDI-UNDP 에티오피아 국가계획위원회(NPC) 15개년계획 정책자문 사업
적도기니 재정경제기획부	2019	■ 적도기니 국가개발계획 자문사업
아부다비 개발기금(ADFD)	2017	■ 아랍에미리트 ADFD 수출금융프로그램 타당성조사 사업

 국제 행사

2025	KDI-LPEM 공동 세미나 1차 ■ 일시/장소: 2025년 8월 21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주제: 불확실성 시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 방안 2차 ■ 일시/장소: 2025년 12월 11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주제: 중소기업(MSME)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2025 KDI-World Bank 글로벌 포럼 ■ 일시/장소: 2025년 9월 25일 / 서울 ■ 주제: 경제 전환을 위한 AI: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지식 파트너십 구축 영국 앨런튜링연구소(Alan Turing Institute): 인공지능 표준 및 규제 공동 세미나 ■ 일시/장소: 2025년 11월 18일 / 영국 런던 ■ 주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AI 표준화 및 규제 제도 방안 ADB: 정책라운드테이블 ■ 일시/장소: 2025년 12월 9일-10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주제: 질적 성장을 위한 아시아 미래 번영 구축
2024	세계은행: KDI-세계은행 녹색성장세미나 ■ 일시/장소: 2024년 2월 28일 / 워싱턴D.C. ■ 주제: Green Transition Strategy, Green Transition Financing, Carbon Pricing 등 브루킹스연구소: KDI-Brookings Joint Seminar ■ 일시/장소: 2024년 10월 22일 / 워싱턴D.C. ■ 주제: Digital Technology, Inequality, and Global Economic Convergence ADB: 2024 글로벌 포럼 ■ 일시/장소: 2024년 12월 17일(화) / 동경 ■ 주제: 글로벌 공급망과 지속가능발전 헝가리 인공지능 정책 및 규제 제도 공동 세미나 ■ 일시/장소: 2024년 10월 3일 / 헝가리 부다페스트 ■ 주제: 인공지능 정책과 규제 제도 방안: 규제, 공공서비스, 혁신
2023	브루킹스 연구소: KDI-Brookings Joint Seminar ■ 일시/장소: 2023년 4월 11일 / 워싱턴D.C. ■ 주제: Productivity in a Time of Change ADB: ADB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 ■ 일시/장소: 2023년 5월 2일 / 인천 송도 ■ 주제: 아시아 복합위기 대응 방안, 글로벌 공급망개편과 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 코로나 19 이후 재정관리체계 등 ADB: ADB 연차총회 부대행사“KDI-ADB 공동세미나: 디지털, 기후, 그리고 회복력” ■ 일시/장소: 2023년 5월 4일 / 인천 송도 ■ 주제: 디지털 전환과 기후 효과 세계은행 TDLC: 2023 KDI-WB TDLC 공동 글로벌 포럼 ■ 일시/장소: 2023년 11월 17일 / 동경 ■ 주제: 개발도상국 발전 제약요소 및 기회 분석, 도시 정책, 지식기반 발전 등
2022	2022 KDI 글로벌 포럼 ■ 일시/장소: 2022년 10월 21일 / 서울 ■ 주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책 사례와 협력
2020	2020 KDI 글로벌 포럼 ■ 일시/장소: 11월 19일(목) 14:00~16:00 / 서울 ■ 주제: 개발을 위한 혁신 *기업과 혁신, 도시와 혁신, 기술과 혁신



KDI CID 지식공유브리프 발간지 목록

2026년 3호 ▶	
이슈톡	Collaboration in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chievements and Future Prospects Katsuo Matsumoto
동향 분석	글로벌 난민 위기 장기화와 인도적 지원의 한계: HDPN 접근법으로 난민 대응 패러다임 전환 한상아
KSP 포커스	한-영 6G 표준협력과 KSP의 새로운 역할 송지은
CID 연구포커스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박 지 은
2026년 2호 ▶	
이슈톡	코끼리 대해부 '개발협력에서 국익' 개발연구실 독일 개발협력 개혁과 한국 지식협력에의 함의 우혜영, 백진영 AI 협력은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무역 데이터로 본 협력의 출발점 방호경
동향 분석	우루과이 플라스틱 순환 경제로의 전환과 향후 협력과제 권유빈 LSE Data Science Institute Brief Christopher Thomas
KSP 포커스	스타트업으로 여는 성장 전환: 우즈베키스탄과 KSP의 새로운 도전 윤근영
CID 연구포커스	개발도상국 물가·생산성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송지은
2026년 1호 ▶	
이슈톡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수립 그 이후: 한국 개발협력의 나아갈 길 한승헌 Revitalising the narrativ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The case of Germany Niels Keijzer
동향 분석	인도네시아 플랫폼 경제 현황 이미연
KSP 포커스	[2024/25 인도네시아 KSP]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투자 촉진과 제도적 과제 김희라
CID 연구포커스	아태지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영향 및 대응 방안 윤지희
2025년 4호 ▶	

2025년 KSP 성과공유 콘퍼런스	KDI 조동철 원장 기조연설 「KSP,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 패널 토론 주요 내용 행사 스케치
이슈톡	KSP와 EDCF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위한 제언 박종규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 AI 에이전트와 표준 경쟁 이강찬 Australia's Climate Change Prioriti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nerships 호주 외교통상부
동향 분석	일상과 산업의 숨은 힘, 측정과학을 통한 KSP 협력 김광섭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 한국 농업개발협력의 전략과 과제 김태화
KSP 포커스	[2024/25 키르기즈공화국 KSP] 수원국 주인의식 제고를 위한 ODA 모니터링·평가 역량 강화 성현지 [2024/25 폴란드 KSP] KSP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AI 사이버보안을 아우르는 새로운 협력의제 구축 이세훈
CID 연구포커스	디지털 전환 시대, 페루 보건의료 혁신과 한-페루 협력 가능성 홍기현
2025년 특별호 	
특별호	국제 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사업(KSP)의 역할 강성진 주요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주요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곽재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과 지식공유사업의 역할 홍성창, 방호경
이슈톡	EIPP는 KSP의 대안이 될 수 있나? 손의영  AI를 위한 NETWORK 이정기
동향분석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도전과제와 한국의 경제협력 방향 윤지희 말레이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한-말레이시아 협력과제 송지은
KSP/EIPP 포커스	Accelerating Digital Synergies: What Opportunities for a Strengthened EU-ROK Partnership? Giulia Torchio 디지털 금융 혁신과 국제개발협력: 우즈베키스탄 KSP Plus 사례를 통한 시사점 우혜영, 정희선  온두라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발전을 위한 지식공유 성과 최진아
CID 연구포커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쟁점 및 현안: 국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김대용, 김지원 
2025년 2호 	
이슈톡	지식공유사업(KSP)이 나아갈 방향 손욱 핀테크(디지털금융)의 발달과 소득 불균형 이종화
동향 분석	칠레 핵심광물 개발 현황과 한-칠레 공급망 협력 방안 강나연 한-호주 기술협력 사례로 본 공급망 안정화 전영진
KSP 포커스	[2024/25 온두라스II KSP] 인프라 및 교통정보시스템 개발 전략 수립 서예주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캄보디아 신용보증공사의 지식공유 여정 최진아
CID 연구포커스	디지털무역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김민정, 노다현 
2025년 1호 	

이슈톡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금융의 역할 고승범 지속가능교통을 위한 저탄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강성철 ▶
동향 분석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사업(PPP) 구석모 ▶ 2025년 세계건설시장 유망 섹터 전망 및 시사점 정지훈
KSP 포커스	튀르키예: 수입대체산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윤근영 페루: 모든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박미서
CID 연구포커스	개발도상국 개발금융 역량강화체계화 및 지식공유 고도화 방안 김대용, 이진이
2024년 특별호 ▶	
이슈톡	기후위기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논의 동향 강성진 ▶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미국 대선 후 산업·통상정책 박지형 디지털 격차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동향 김서용
동향 분석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선이 ▶
KSP 포커스	[2023/24 불가리아 KSP] 미래에 대응하는 불가리아 건설사업의 도전과 기회 김지원
CID 연구포커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방호경 신용보증제도 사업 기획 시사점: 베트남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최다인, 하지유
2024년 3호 ▶	
이슈톡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최희주 유럽 공급망 실사지침과 우리 기업의 대응 오범택 ▶
동향분석	한국 주택정책의 성과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권혁신 ▶ 개발효과성 담론에 대한 한국의 기여: GPEDC와 부산포럼을 중심으로 송지선
KSP/EIPP 포커스	헝가리 EIPP: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최효정, 안치영
CID 연구포커스	불가리아 연구개발 현황과 시사점: 소피아테크파크 산학연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남보라, 김하아람
2024년 2호 ▶	
이슈톡	기후 문제에 대한 개도국의 시각 정홍상 ▶ 디지털헬스케어의 중요성 및 지식공유의 의미 강재현
동향 분석	국내 수소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이슬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지식화와 수도이전 국제협력 추진방안 방설아 ▶
KSP 포커스	[2023/24 칠레 KSP] 병원 대기 끝에 죽음이 아닌,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홍기현
CID 연구포커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ESG,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역할 및 정책과제 김대용, 황서영
2024년 1호 ▶	

이슈톡	ESG와 국제개발협력 정무경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 정지훈 
동향 분석	순환경제로의 전환, EU는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나? 박상우 중동정세와 향후 전망 강문수 
KSP 포커스	리투아니아와 문화창의산업 (Cultural & Creative Industries) 안치영
CID 연구포커스	아프리카 지역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국제개발협력 우혜영, 이소희
2023년 특별호 	
이슈톡	2023년 국제개발협력을 되돌아보며 김은주 2024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금융의 역할 권율  기술협력 ODA,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방호경, 이소희
동향 분석	2023년 동남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전망 이요한  2023년 아프리카 ODA의 주요 특징 및 전망 김은경  2023년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과 전망 정상희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일본의 개발협력 과제와 새로운 대응: 2023년 개발협력대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김은지 
KSP 포커스	페루 경제특구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로드맵 수립 윤근영
CID 연구포커스	탈탄소 기술 품목의 무역저해요인 분석 및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시사점 방호경
2023년 3호 	
이슈톡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개발협력 전략 김연규 해외건설기업 진출현황 및 시사점 정창구
동향 분석	국제협력 플랫폼, KSP의 의미 이미연 유럽연합의 개발도상국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오정은 
KSP 포커스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KSP 사업 선정의 현황과 과제 이세훈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현주소와 단기적 개선 방안 서규혁
CID 연구포커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디지털 편 이진이
2023년 2호 	
이슈톡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사후관리가 왜 중요한가? 안충영  ESG 연계 개발협력과 민간기업의 참여 이준희 
동향 분석	기술협력사업의 PDM 활용 개선방안: 지식공유사업을 중심으로 강경재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스마트 헬스케어 김준

KSP 포커스	KSP 주제분류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 노보배 [우즈베키스탄 KSP+]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한재현
CID 연구포커스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확대를 통한 국내외 청년의 글로벌 기회 확대 우혜영
2023년 1호 ▶	
이슈톡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임호열  글로벌 불황에 대한 안정망, 국제개발협력 성한경
동향 분석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개발협력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 김은주  스마트 생산 분야의 개도국 정책자문 수요와 정책 제언 방향 이재광  COP 27 손실과 피해의 주요 합의사항 황금물결
KSP 포커스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육성 유성희
CID 연구포커스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를 위한 정책과제 김대용, 이소희
2022년 3호 ▶	
이슈톡	개도국의 혁신투자는 다다익선인가? 정성철  우리나라 '정책자문 ODA 사업'의 과제와 방향성 김성규 
동향분석	개발협력평가와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가능성과 도전과제 홍문숙 아프리카의 정당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효과적 재정지원 방안 김유나, 홍은선
CID 연구포커스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김정옥, 윤지희 중미공동시장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중미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방호경
2022년 2호 ▶	
이슈톡	세계 식량 위기와 국제개발협력 이준원 포스트-코로나 세계에서의 KSP의 중요성 윤석현
동향 분석	COVID-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ODA 김지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 논의 동향 황금물결 
KSP/EIPP 포커스	[불가리아 KSP]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의 전환 전략 수립 한재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추진 배경 및 특징 김하아람
CID 연구포커스	연결성과 국제개발협력 홍성창
2022년 1호 ▶	
이슈톡	국제개발협력의 본질과 한국 개발협력체계 발전방향 정혁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의 도래가 한국 개발협력에 던지는 함의와 과제 김양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법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으로의 전환 장은혜
동향 분석	KSP 고도화 전략과 지식공유사업법(가칭) 홍성창, 김서영, 이미연 국제탄소시장과 ODA 활용 동향 김예림
KSP/EIPP 포커스	[페루 KSP] FTA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활용으로, 페루에게 전하는 한국의 경험 김지원, 윤근영 [세르비아 KSP] 도시개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송지은
CID 연구포커스	2021 CID 국제개발협력 연구 우혜영

 는 KDI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해당 게시판으로 연결,  의 경우 해당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됨.

지식공유 Brief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식공유브리프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원고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원고료가 있습니다)

문의 김소희 연구원(044-550-4401, sohee.kim@kdi.re.kr)

발행 KDI 국제개발협력센터(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발행인 김정옥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편집장 방호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편집위원 윤지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

편집간사 김소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연구원

문의 044-550-4401, 044-550-4280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